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56
----------	------

발의연월일 : 2025. 1. 13.

발 의 자 : 김기현 · 정성국 · 김상욱
김대식 · 김예지 · 한지아
김태호 · 김용태 · 성일중
조배숙 · 김장겸 · 이만희
의원(12인)

제안이유

6·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6·25전쟁 중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국군포로”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6·25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6·25전쟁 국군포로가족”이란 6·25전쟁 국군포로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6·25전쟁 국군포로(이하 “국군포로”라 한다)의 생사 확인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① 국군포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국군포로 및 6·25전쟁 국군포로가족(이하 “국군포로가족”이라 한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군포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국방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군포로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국군포로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증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념사업) 정부는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국군포로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와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국군포로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별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별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

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